



유럽, 금융규제 강화 조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의 금융규제¹⁾가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임.

- 독일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에 가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.
 - 독일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 강화 조치들은 불충분하며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G20 국가에 촉구함.
 - 모든 금융기관, 금융부문, 금융상품에 대해 예외 없이 규제를 부과하여 헤지펀드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.
- 영란은행(BOE)도 금융규제 강화에 동참함.
 - BOE는 지금까지의 규제방안만으로는 대형 은행들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“대마불사” 인식을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은행 규모를 축소하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은행 규모가 축소되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경제 전체나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.

■ 현재까지 은행의 대마불사 논리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에 고착되어 있음.

- 은행들은 대형화를 통해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됨.
- 또한 파산지경에 도달한 은행들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경우 자금조달비용도 낮추게 됨으로써 결국 은행들의 대형화 전략이 더욱 조장됨.
 - 리만 브라더스 붕괴 이후 200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 7,000억 달러(약 768조 원)가 투입됨.

1)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불투명한 자기자본매매 등의 폐해를 규제,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(SIFIs: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의 도덕적 해이 방지, 장외파생상품시장,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.

■ 자기자본, 유동성, 레버리지 관련 건전성 규제와 SIFIs 규제 등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조달 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.

- 유동성 규제와 함께 총자산 대비 자본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은행의 수익창출 기회가 축소될 수 있음.
- SIFI(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에게는 추가부담금과 함께 최저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.
- 새로운 금융규제는 은행권 자본조달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작용하여,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.

■ 또한 은행세 부과, 소비자보호 등은 금융기관의 경영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.

- 독일,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실시 또는 계획 중인 금융거래세(또는 은행세)는 은행권의 수익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됨.
-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은 시스템 정비 확대로 은행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.

(AFP 10/27, 국제금융센터 10/29)